

전방위 대응 인맥 총동원 '맨투맨 형식' 창구 일원화 치협 언론 TF팀 대책회의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조해 각 언론과 인맥이 있는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일대일 형식으로 단일 창구를 마련, 보다 효과적인 언론 홍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지난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KBS 뉴스에 보도된 '치과에서 빼낸 금니 되팔아 이익'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해 지난 7월 29일 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8월 4일에는 대언론 TF팀을 가동하는 등 최근 공중파 방송 보도 파문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손정열)와 서치 홍보 관계자 중심으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KBS 보도 방향과 의도를 파악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보도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요구했으나, 결국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보도됐다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 8월 4일에는 치협 홍보위원회 관계자들과 서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언론 TF팀 대책회의를 갖고 치과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대상으로 단일 창구를 마련해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윤병만 서치 섭외이사는 "지난 MBC 건을 비롯해 이번 KBS 보도에서도 봤듯이 회원들 각자가 서로 흥분해 중구난방으로 언론 보도의 불공정 등을 토로해 사실상 효과적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맨투맨 형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시혁 전 서치 섭외이사는 "언론사의 조직을 철저히 파악, 뉴스 보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인맥 관리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성식 원장도 "지난 2004년도 모 일간지에 이번과 같이 폐급 관련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폐급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는 선행 기사였다"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인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른 치과 관련 공중파 보도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치과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 이들 방송사를 대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치과의사들이 노인틀니사업과 장애인 무료 진료사업 등 이미지 개선에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치과계를 매도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혁 서치 전 섭외이사는 "치과계 내부에서 의료법에 저촉되거나 언론 쪽에서 이용할 만한 내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리스트를 만들어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원균 치협 공보이사는 "이와 같은 언론 보도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 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도를 막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과의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회장단들도 인맥을 활용한 대언론 창구의 역할과 이번에 구성된 TF팀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번 TF팀의 성격은 정식 위원회가 아닌 홍보위원회 산하로 하고, 시간이 생명인 언론을 상대로 하는 만큼 기동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TF팀원이 원활하게 대언론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구 부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에 대비, 대언론 대화 창구 유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홍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맥을 총 동원, 기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안성모 협회장, 이수구 홍보담당 부회장, 김재영 공보담당 부회장, 이원균 치협 공보이사, 손정열 치협 홍보이사, 주동현 치협 섭외이사, 정철민 서치 부회장, 이성국 서치 홍보이사, 윤병만 서치 섭외이사, 이시혁 전 서치 섭외이사, 나성식 원장 등이 참석했다.

"치과공공의료 확충 협조체제 유지" 치협, 대공협과 공공보건의로 대책 논의

치과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치협과 대한공중보건조사협의회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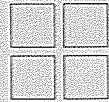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와 신호성 기획이사는 지난 7월 20일 시내에서 대한공중보건조사협의회(치과회장 황대일) 임원 등을 만나 공공치과보건의료 확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보건의사들이 먼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돼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회의를 주최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신호성 기획이사는 "공공보건의료에 몸담고 있는 인력

이 공보의들이 태반인 만큼 본인들의 문제로 인식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대일 공보의 회장은 "현재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있는 만큼 치협 내에 전담지부가 신설돼야 한다"며 "여기에 공보의들이 속해,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민용 치무이사와 신호성 기획이사, 양승욱 변호사, 대공협 황대일 회장, 이병철 대공협 부회장, 보건복지부 중앙배치기관 대표 이재웅(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연구원) 공보의,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김세명, 박종혁, 김효중, 임종환 공보의가 참석했다.



치기공과 치위생과 4년제 전환 붓물 우려 고려대 등 8개 대학 신청서 제출 '주목'

치기공과와 치위생과들의 잇단 4년제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치과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학제변경이 다시 치과계 및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 가천의과대학교와 가천길대대학,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 등 8개 대학이 각각 통폐합 의사를 밝혔다.

이들 대학이 통폐합되면 전체 전문대학 입학정원 3646명이 줄어들게 된다. 치과계와 관련해서는 이번 접수 및 향후 추진결과에 따라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의 치기공과와 가천길대, 서울보건대의 치위생과가 각각 4년 학제로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년제 치기공과는 부산 가톨릭대 보건과학대가 유일하며 치위생과의 경우는 연세대, 한서대, 남서울대 등 3개 대학에서 4년제로 입학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추진방향이 학생수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현실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 대학경영의 합리화와 교육연구 여건의 질적 개선을 통한 특성화 추진 등 '사립대의 실질적 슬림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이들 대학의 4년제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더구나 교육부에서는 향후에는 수시로 통폐합 신청서를 접수 받아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통폐합 사립대학은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치기공과 및 치위생과의 4년제 전환 역시 고려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존 고려대보건대 치기공과의 경우 수차례 고대 단과대학으로 편입,

4년제 학제로 변경을 신청해왔으나 교육부에서는 적절한 근거와 사유가 타당치 않고 특히 수도권 4년제 입학정원을 규제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해왔었다. 또 통폐합을 신청한 치위생과의 경우도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영역 확장과 다양한 예방치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4년제 학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통폐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실하다고 전제한 한경순 가천길대학 치위생과 학과장은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 한계가 있다. 현재 외국 치과위생사 교육의 커리큘럼을 참고하는 등 학제 변경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학제 변경은 치과위생사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예방치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장기적으로는 치과계 전체를 위한 것으로 결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치과 개원의들은 이 같은 진행상황에 대해 결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사안이 전혀 다른 사립대 통폐합 구조개편 문제와 치기공과 및 치위생과 학제문제를 논리적으로 묶어가는 것은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본다"며 "또 어떤 직업이든 전문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불필요한 교육기관 및 과정 증설은 기본적으로 논의의 부당성 뿐 아니라 부차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신청결과에 대해 8월중 논의를 거쳐, 9월초에 인가여부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감염성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 병·의원 145곳 무더기 적발 치과도 20곳 포함...고발·과태료 조치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병·의원 145곳이 최근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이중 치과의원도 20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각심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7월중 지방환경청과 지자체로 하여금 전국 소재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 9966개소를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5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했다고 지난 8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45개소 병·의원 가운데는 치과의원도 20곳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치과의 경우 대부분 현지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치과의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 20곳의 처분내역을 보면 ▲고발조치 1곳을 비롯해

▲과태료 조치 7곳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12곳 등이다.

특히 서울 소재 모 치과의 경우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된 가운데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치과 7곳은 전용용기 미사용과 관리대상 미작성, 보관기관 초과 등을 위반해 적발됐으며,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받은 12곳은 보관표지판 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관리대상 부실작성 등의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보관표지판 미비가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리대상 미작성(5곳)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3곳)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이행(2곳) ▲기타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 미이행(1곳), 보관기관 초과(1곳), 필증미비치(1곳) 등으로 나타났다.